

■ 화제의 뉴스 ■

“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는 부당”... 2심 재판부 금융사 손 들어줘

부동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펀드)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2월 1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위 유권해석 및 그와 같은 취지의 1심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

이번 판결에는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가 사후등록제로 바뀐 점이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즉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펀드의 등록이 펀드의 설정요건이었으므로 등록되기 전 펀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그 논거가 힘을 잃게 되었고,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.

애초에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가 펀드 등록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취득세 4.6% 중 30~50%를 감면해줬습니다. 이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대상인 펀드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등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2014년 10월경 안전행정부가 이와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고, 금융기관들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.

본건 법적 분쟁은 기존 관행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금융사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간 첨예한 대립에 따른 것인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파이낸셜뉴스 - “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는 부당”... 2심 재판부 금융사 손 들어줘\(2015. 12. 1.\)](#)